

도지사 선거전, 검찰 공방·막말 프레임으로 격화

최근 김관영 선대위 논평서 '개·돼지' 표현 둘러싸고 이원택 vs 김관영 측 충돌 이 후보 측 "명백한 도민 비하"... 민주당·도의회 의원들도 김 후보측 규탄 김 후보측 "전북 거냥 표적 검찰, 도민 알기를 개·돼지 취급 방증... 본질 왜곡"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전이 막판 논란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출마한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른바 '합행감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돼지' 표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이 정면충돌하고 전북도의회 도의원 측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관영 후보 선대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시작했다. 김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중앙당이 해당행위 엄단 공문에 이어 압행감찰까지 파견했다'며 '유독 전북을 거냥해 표적 감찰을 벌이는 것은 전북도민 알기를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돕는 민주당 권력당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북 민심을 억압하는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다른 지역의 공개 지지 행위에는 침묵하면서 전북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북을 표적 삼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또 최근 전북지역 일부 민주당 권력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 독선정치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당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중앙당 권력의 횡포가 민심 이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 측은 김 후보 선대위의 표현이 '명백한 도민 비하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원택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무리 정치 공방이 치열해져야도

전북도민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막말은 용납될 수 없다"며 "김관영 후보와 선대위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는 현금 실태 의혹과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 도민에게 실망을 안긴 상황에서도 반성과 성찰 대신 막말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민의 지존심과 품격을 훼손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당 비판을 이유로 지역민을 동물에 빗대는 표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도민 전체에 대한 모욕적 인사이자 시대착오적 정치 언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치적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도민 전체를 혐오적 표현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구태정치와 갈등 조장 정치로 전북의 미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후보와 선대위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김관영 후보는 현금 실태 및 은폐 의혹 등 중대한 정치적 책임 앞에 직면해 있다"며 "정신적 안정은 해명보다 피해자 사과와 막말 정정, 국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관영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판이 "본질 왜곡"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 선대위는 17일 추가 논평을 통해 "전북도민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표현의 본질은 민주당 지도부가 도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정치적 비하"라며 "비하 선대위가 도민을 직접 '개·돼지'라고 표현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또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역시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선대위는 "민주당의 논리만 과거 민주당이 했던 수많은 발언도 모두 국민 비하가 되느냐"며 "자신들은 사용하면서 상대에게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18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 측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전북도민 알기를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표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도민 모욕"이라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민 전체를 끌어들이는 자극적인 막말 정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18일부터 18일까지 연속 3일간 '개·돼지' 막말 논란을 통해 정치가 선을 넘는 극단적인 표현을 계속하며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보여 선의의 정책경쟁 선거를 비하하는 많은 도민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표현 논쟁을 넘어 전북도지사 선거의 민심 흐름과 민주당 내부 갈등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 전북도의회 의원과 도민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 측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선거 막판 전북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조양덕 시장 후보 등록 무효 "변화의 길 멈추지 않을 것"



오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조양덕 후보가 후보 등록 무효 사실을 밝히며 전주 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조 후보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시민의 과분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운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조항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며 미숙함"이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저를 믿고 전주의 미래를 함께 꿈꿔주셨던 시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들께 여러날째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기적과도 같았다"며 "전주를 바꿔 달라며 손을 잡아주던 시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밤낮없이 헌신한 당원들의 땀방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전주시장 후보의 자격은 없었지만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열정은 잃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전주 발전을 위한 소리를 아끼지 않는 행동하는 시민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조양덕 후보가 전주시장 후보 등록 후 관련 사실에 대한 심의를 통해 18일 오후 5시경 후보 등록 무효 통지를 조양덕 후보에게 우선 구두로 통보하고 공식으로 서류는 19일 발송한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조양덕 후보 측은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 책임자"

전북 교수·연구자 300명 이원택 도지사 후보 지지



전북 지역 교수와 연구자 300명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전북 지역 교수와 연구자 300명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와 함께 전북도 도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전북대학교 신형식·허강무·최석규·권대규·강문경 교수와 우석대학교 박진희 교수,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이호 교수, 원광대학교 이동기 교수 등 지역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이원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동행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와 청년 인구 유출, 산업구조 정체, 소득 격차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이번 지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자 시대적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전북의 개인소득은 여전히 국가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개발 중심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과 실질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이날 선언에서 특별한 전북의 꿈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북이 가진 사람과 산업, 문화와 자연 혁신 역량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가 성장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미래 전략으로 △디지털 AI 산업 육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새민금 미래투자 확대 △RE100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첨단산업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이원택 후보는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전북의 구조적 문제를 미래전략으로 연

결합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북이 과거 성장의 한계를 반복할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는 교수·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북의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전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새민금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도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해 도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만 믿고 민주주의의 길 걸겠다"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5·18 46주년 맞아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출마하고 있는 김관영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월 열사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도민만 믿고 담대한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46년 전 불의한 정치권력에 맞서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월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18 정신의 근간은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시민의 권리와 정의를 지켜냈다"며 "민주주의는 특정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독단과 오만으로 도도한 민심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월 열사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본질과 시대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관영이 의뢰자만 당당한 무소속의 길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전횡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다"며 "우리의 미래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이 결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지역 민심과 관련해 "물결처럼 휘몰아치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민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오만한 정치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오월 열사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는 해로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것"이라며 "오월 열사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본질과 시대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관영이 의뢰자만 당당한 무소속의 길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전횡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다"며 "우리의 미래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이 결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지역 민심과 관련해 "물결처럼 휘몰아치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민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오만한 정치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오월 열사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는 해로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사회 각계각층, 이학수 시장 후보 지지 잇따라 | 민주 정읍청년회 등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에 대한 정읍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정읍시체육대회 임원진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16일과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읍청년위원회(위원장 송화수),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지회장 이호춘), 정읍시배드민턴협회(회장 공정훈) 회원들이 잇따라 이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를 표명했다.

지역 청년단체와 노인단체, 생활체육단체 등이 연이어 지지 선언에 나서면서 정읍 지역 내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청년위원회 위원들은 지지선언에서 "청년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복지 정책 확대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읍의 미래를 위해 검증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가진 후보가 필요한데, 이학수 후보가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읍청년위원회.

적격이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정읍지회 회원들은 "어르신 복지와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읍시배드민턴협회 회원들은 "민선 8기 동안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 체육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체육 환경이 한층 나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발전은 민선 9기에도 계속되어야 하기에 이학수 후보

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정읍시분원 회원들과 유준병 국회의원 후원회도 각각 이학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보내주시 지지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시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이 1명당 1억 지원' | 국힘 양정무 도지사 후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제호 공약인 '출산·인구 회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이날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미래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전북은 광역단체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아이 1명당 총 1억원 규모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 가정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8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첫째·둘째·셋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총 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와 함께 월 240만원 수준의 안정적 양육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책이 아니라 '정주 기반 인구 회복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원 대상은 전북 거주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실제 장기 거주를 유지해야 지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학교를 다니며 지역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은경 혁신당 소속 전주시의원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가 지역 생활민원 해결과 복지 현장을 직접 챙기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전주시마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나서며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생활속 불편을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컴퓨터재활노인복지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이 후보는 평소 지역 복지현장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중심 소통과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며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가 이이홀대안정 인근 도로 배수로 파손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구간은 파손으로 인해 시민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후 완산구청이 현장 확인을 거쳐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작은 생활 불편이라도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정치 이전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움직이며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